

No. 11

SAe.a.11

민주개혁정치모임 정책토론회

전환기의 남북관계

일시 : 94. 9. 16(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민주개혁정치모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금산빌딩 202호
T. 785-3161(代) F. 785-3165
(150-010)

 민주개혁정치모임

민주개혁정치모임 정책토론회

전환기의 남북관계

일시 : 94. 9. 16(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민주개혁정치모임

전 환 기 의 남 북 관 계

사회 : 金元雄 의원(민주개혁정치모임 정책위원장)

(인사말) 전환기적 사고와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李富榮(민주개혁정치모임 의장, 민주당 최고위원)===== 1

(발제문) 남북한 관계의 전환점에서
崔相龍(고려대 교수)===== 3

(토론요지) 전환기의 남북관계
林采正(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외무통일위원)===== 11

(토론요지) 통일의 시대와 우리의 과제
金南植(평화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5

(토론요지) 남북한 통일준비 문제
李漢久(대우경제연구소장)===== 21

(토론요지)
柳根一(조선일보 논설실장)===== 25

(토론요지)
朴虎聲(서강대 교수)===== 27

(토론요지)
具昌林(민자당 의원, 국회 외무통일위원)

발제, 토론자 약력===== 31

전환기적 사고와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李 富榮(민주개혁정치모임 의장, 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두달여동안 남북관계는 적지않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김일성 북한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이 연기되었고, 그 이후 남북관계의 개선도 교착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성되었던 화해의 분위기는 두달여만에 다시 불신과 반목의 분위기로 뒷걸음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남북한 관계가 다시 뒷걸음질 치고 있던 사이, 북-미관계의 개선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이미 전문가회담을 개최하여 경수로 지원문제와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일본을 비롯한 서방 주요 국가들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대북진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급속히 냉각된 반면, 주변 강대국들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같은 상황은 결국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의 소의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한반도 문제와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대북 경제교류의 주도권까지 다른 나라들에게 빼앗겨 버릴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둔 화해의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불신과 반목의 상황으로 반전되어 버린 데에는 일관성없는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이 큰 영향을 끼쳤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공안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일부 강경론자들의 주도로 대북 강경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정부의 정책 또한 이에 끌려다니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맞은 결과는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어 있는 방관자의 처지인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외면한 맹목적인 강경론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한 관계는 몇몇 사람의 뜻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화해와 공존의 시대적 전환기는 그에 걸맞는 우리의 전환기적 사고와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우리는 오늘날 전환기속에서 모색되어야 할 남북한관계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상룡 교수님의 발제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각계의 전문가 여러분을 토론자로 모셔서, 각계의 다양한 정책 스펙트럼 속에서 무엇이 시대의 흐름과 함께 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이성적 사고와 정책인가를 함께 논의해 볼 것입니다.

민주개혁정치모임이 준비한 오늘 정책토론회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개혁모임의 활동에 격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南北韓 關係의 轉換點에서

崔 相龍 (高麗大 教授)

1. 脫冷戰狀況,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요즈음 우리는 나라 안팎의 정세의 변화를 곧잘 포스트냉전이니 脫냉전이라 부른다. 이 「포스트」와 「脫」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냉전 자체의 의미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냉전은 멀리는 근대적인 의미의 사회주의체제가 성립한 후부터, 가깝게는 제2차 세계대전후 특히, 1947년 3월 트루만독트린의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정치현상이다. 우리가 미소냉전 또는 동서냉전으로 불렀던 지구상의 양극체제는 이미 붕괴되었고, 그 냉전의 마지막 孤島가 바로 한반도이다. 미소냉전은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의 전면적 양극화요, 거기다 군사력의 세계적 조직화가 합쳐 이루어진 역사상 미증유의 대결구조였다. 미소냉전은 미소 이외의 다른 나라의 국민에게 타율적인 양자택일을 강요했으며 수많은 인간에게 처참한 희생을 가져다주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비동맹 중립이라는 제3의 길이 등장했으나, 한반도 냉전은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양극적 대결 이외의 선택지를 갖지 못했다. 그래서 좌우 상하의 차이는 있지만, 7000만 동포 전부가 냉전과 분단의 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탈냉전은 우리가 소망했던 역사의 방향이요, 냉전의 청산은 통일에 앞서 우리가 이룩해야 할 중대한 정치과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냉전과 탈냉전을 악마와 천사의 사상논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탈냉전의 세계정신을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탈냉전상황 자체를 다음과 같은 3가지 수준에서 분석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세계적 수준의 미소냉전의 붕괴이다. 사실 미소냉전은 한쪽이 다른 한쪽의 직접침략에 의해 붕괴될 가능성은 애당초 없었다. 미소냉전의 붕괴도 소연방 자체가 스스로의 결함때문에 내부붕괴한 결과이다. 미소냉전체제의 붕괴

는 2500년의 서양정치사에서 보면 고대보편사회의 붕괴와 중세사회의 붕괴에 견줄 만한 문명사적 대전환이라 할 수 있다. 고대로마의 붕괴는 신선한 기독교의 등장으로 그리고 중세천년의 붕괴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2대운동에 의해 새로운 세계질서로 이어졌다. 그런데, 세계수준의 미소냉전체제는 완전히 붕괴했지만, 그 공백을 메울 만한 위대한 대체사상이나 운동은 보이지 않고 그저 다양한 「문화의 충돌」이나 공존으로 역사가 표류하고 있는 느낌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사상적 혼미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의 탈냉전이 냉전으로 인한 전쟁의 가능성을 현저히 줄임으로써 평화의 메시지를 지구촌 구석구석에 전달하여 역사적 화해의 무드가 고조되고 있는 점이다. 이스라엘과 PLO의 화해나 만델라의 남아공의 경우는 정치적 평화의 위대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남북한 냉전체제의 嚴存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한반도냉전의 해결 없이는 세계냉전의 완전한 종말을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초기냉전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중심이 되는 계열화로 인하여 냉전의 틀 속에서도 남북한이 각기 체제 자체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소냉전 붕괴 후의 남북한은 위로부터의 조직적 통제력을 결여한 채 각기 체제 역량의 극대화를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어 근친중요현상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평화는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북한의 선택 즉, 북한이 세계대세에 적응하여 핵문제의 해결과 함께 남한과의 평화공존을 통하여 점진적인 개방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지금 이 순간 남북한의 냉전은 평화공존이나 파국이냐 하는 큰 전환의 頂点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대한민국 내(內)의 냉전상황이다. 미소냉전과 그 축소판인 남북한의 대결구도가 계속되는 동안은 남한 내에서 냉전이 자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남한 내의 공공연한 냉전은 세계적 수준의 냉전체제의 붕괴의 산물이며, 거기다 북한이 脫냉전의 기류를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큰 정치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국내냉전은 ① 「無냉전」 ② 냉전 ③ 脫냉전의 과정을 밟아 갈 것이며, 지금 우리는 ②에서 ③으로 가는 이행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행기에 나타난 주사파논쟁은 일종의 과도기적 질병이며,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되리라고 본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국가의 기틀을 위태롭게 하는 사상이나 운동은 남북한간에 냉전이

엄존하는 한 실정법에 의해 규제되어 마땅하다. 요컨대, 한국 내의 냉전청산은 위와 같은 냉전의 중층(重層)적 의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분단은 냉전의 산물임에 틀림없지만, 脫냉전이 자동적으로 분단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 사회에는 주사파와는 전혀 세계관을 달리하면서 민주화와 탈냉전을 연결시키려는 건전한 민주시민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선의의 노력마저 진부한 사상논쟁으로 몰아부치려는 일부의 의도는 그 질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우리 대한민국사회가 시대착오적인 주사파의 주장에 흔들릴 정도로 불건강하지 않다는 판단기준은 소모적인 사상논쟁에 신선한 지침을 제공했다. 脫냉전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선악 2분법의 논쟁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진보도 진보 나름, 보수도 보수 나름이기 때문이다. 「선」과 「악」 극좌와 극우 사이에 존재하는 양질의 저력을 수렴해 가는 것이 脫냉전 시대에 걸맞는 통합의 정치이다. 말이 통하는 보수와 말이 통하는 진보를 같이 존중할 수 있는 관용과 용기가 바로 脫냉전시대에 어울리는 덕목이다.

2. 北韓核問題, 어떻게 볼 것인가

「핵을 가질 의사도 능력도 없다.」 이 말은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할 때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해 왔었다. 그리고 북한핵에 대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를 갖고 있는 미국의 당국자 가운데는 북한이 최소한 한 두개의 핵을 갖고 있다든가 아직 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50%라는 묘한 여운을 남기는 사람도 있다. 우리 국민으로서 가장 믿어야 할 김영삼 대통령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언명한 바 있다. 이쯤되면 북한핵과 관련되는 당사자들의 의견은 거의 다 나온 셈이다. 그런데 평균적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헷갈리지 않

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핵문제가 가지는 위험성마저 일상적 무관심 속에 풍화되어 버린 느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은 각기 다른 절실한 이유때문에 국교수립이라는 큰 방향에서 핵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세계가 주목하는 외교문제 하나를 매듭짓기 위해 그리고, 북한은 체제수호를 위한 대외적 보장을 위해서 핵문제에 관한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북한과 미국에 효과적이지 못한 메시지 보내지 못한 채 實利와 名分 사이에서 혼미를 거듭해 왔다.

그동안 북한핵을 둘러싼 국내외의 논의를 지켜 보면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치적 의미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로 북한의 일관된 정책목표는 북한체제의 유지이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선택에 있어서는 융통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이 체제유지에 결정적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면 끝까지 핵을 고집할 것이고 반대로 핵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체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판단을 내리면 핵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당근과 제재를 통한 채찍을 저울질하는 경우도 그 당근이 효력을 가지려면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의 최우선순위의 국가이익인 체제유지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채찍이 의미가 있으려면 북한이 그 채찍에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체제붕괴를 초래할지도 모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그 채찍의 결과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미국은 대화를 통한 당근의 길을 선택했고, 그 대화의 내용도 북한의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는 수준까지 올려 놓은 셈이다.

이와 같은 기본인식에서 볼 때 그 다음 둘째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북한핵 문제 해결의 능력과 책임은 일차적으로 미국에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나 그것이 냉엄한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미국은 그 동안 한국의 핵보유를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으며 북한핵에 대해서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일관되고 강도 높게 반대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이 정녕 북한 핵보유를 지지하려고 한다면 미·북한의 핵논의에서 미국의 이니셔티브를 원칙적

으로 지지함으로써 과거 핵 및 특별사찰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 핵문제에 관한 한,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대미종속으로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비용이 적은 선택이라고 보아야 한다. 남북한 당국이 직접 북한핵을 대화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북한 핵협상의 단계마다 우리의 몫을 요구함으로써 불필요한 의견차이를 노정시킬 것이 아니라, 핵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을 미국측에 入力시켜 미국이 대북 핵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것이다. 우리는 핵문제에 관한 한 미북한 접촉에서 주권의식에 대한 과잉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으며 「소외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현시점에서 북한이 핵문제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잃어버린 것이 없다. 무엇보다 전쟁의 위험을 일단 배제함으로써 우리의 평화통일의 이니셔티브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북한을 향해서는 남북한의 정부당국이 엄숙히 약속한 「남북합의서」의 비핵화 조항을 토대로 언제라도 대화할 수 있다는 문을 열어 두고 미국을 향해 북한의 핵보유를 거부하는 우리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이를 위해 미국이 적절한 정책을 구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3. 조용하면서 내실 있는 統一準備

우리는 「냉전형 분단국」의 통일의 사례를 보았다. 베트남, 독일, 예멘의 경우이다. 그런데 이 셋의 통일의 방법을 보면, 그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인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통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베트남의 경우는 전쟁으로, 예멘의 경우는 처음엔 평화적인 방법이었으나 끝내 무력으로 통일되었으며, 독일의 경우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쪽이 다른 한쪽을 통합했다. 이들 사례가 주는 교훈은, 국민의 삶의 질이 높고 나라를 지

킬만한 효과적인 군사력을 갖춘 쪽이 통일의 이니셔티브를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멀지 않은 장래에 다가올 통일한국의 주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역사적 책무와 함께 중압감을 느낀다. 이제 통일은 먼훗날의 당위(Sollen)가 아니라, 존재(Sein)로서 우리의 視野에 들어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든 국민이든 이른바 「흡수통일」의 修辭로 비생산성적인 논의를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하여 조용하면서 내실 있는 통일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의 준비에는 통일비용, 법제도의 정비, 통일문화의 창달 등 여러 수준에서 접근 가능하나, 여기서는 필자의 전문영역에 한정하여 통일한국이 추구해야 할 3가지 정치이념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자유에 대한 확신이다. 자유의 정의는 200여종이나 된다고하나 그 모든 정의가 인간의 자기실현욕구를 전제로 하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그동안 자유에 대한 냉소와 니힐리즘에 익숙해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자유나 빵이나고 외치던 궁핍의 시대에는 자유의 주장은 일종의 사치였다. 반공을 최우선순위에 두었던 냉전시대에는 권위주의와 파시즘의 유혹 앞에 자유주의는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었다. 그래서 자유와 자유주의는 좌우 양쪽으로부터 천대받아왔으며 한때는 자유이념의 空洞化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도 했다. 그러나 보라. 그렇게도 도전적이었던 左의 사회주의체제와 그렇게도 억압적이었던 右의 권위주의체제를 붕괴시킨 내면적 가치가 바로 자유가 아니고 무엇이던가. 자유는 가끔 적나라한 폭력 앞에서 공포의 침묵을 강요당하지만 흡사 활화산처럼 상황의 성숙이 있을때 언제나 비약의 돌파구를 마련했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 자유화(liberalization)라는 개념을 상정한다. 그들에 의하면 자유화는 개인이나 집단이 생명과 자유의 치명적인 상실 없이도 체제측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데 권위주의체제는 반드시 이 자유화의 단계를 거쳐 민주화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제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려야할 시점에서 자유는 통일한국이 지켜나가야할 가장 소중한 정치이념임에 틀림없다.

둘째는 평등의 문제이다. 평등은 자유와 함께 근대시민사회의 2대중심가치이다. 우리는 여기서 자유와 평등의 긴장 또는 보완관계에 관한 긴 학술적 논의를 할 겨를이 없다. 다만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근대적인 의미에서 가장 체

계적인 평등사상인 사회주의가 바로 그 「권력에 의한 평등」때문에 적어도 경제체제로서는 지구상에서 예외없이 멸망했다는 사실이다. 권력을 통한 사회주의적 평등은 결국 빈곤의 평등과 하향평준화를 초래함으로써 사회주의 본래의 이상의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했다. 실제로 사회주의국가의 인민보다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의 85%이상의 중산층이 보다 양질의 평등을 누리고 있지않은가. 반세기동안의 자유·자본주의 對 평등·사회주의의 이분법적인 대립은 결과적으로 자유주의적 경쟁을 통한 평등이 훨씬 향상된 삶이란 것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반드시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으로까지 질주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현대사에서 얻은 값진 교훈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한국의 정치이념을 구상함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자유를 중심축에 두면서 평등이념을 再定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간의 자기실현욕구와 능력은 잘못 운용하면 엄청난 부패를 낳지만 근본적으로는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현대사의 경험에서 보면 양질의 평등은 자유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며 또한 그 자유가 방종으로 타락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

그 다음 셋째는 평화의 추구이다. 우리는 전후 동서냉전의 최초의 희생으로서 동족상잔의 처참한 사상전쟁을 치렀으며 그 유산은 현대한국사회의 모든 갈등의 뿌리로 남아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시대의 지상과제이며 통일의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기도하다. 우리는 고도로 산업화된 민주국가간에는 과거 200년동안 단 한번도 전쟁이 없었다는 경험적인 연구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에 머무르지 않고 체제의 민주화를 통한 구조폭력의 배제에 눈을 돌려야한다. 최근 시민의 호응을 크게 얻고있는 환경운동, 생명운동은 운동측의 자기개혁에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며, 그 평화의 메시지는 나라 안팎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갈 것이다.

세계사의 흐름으로 보나 한반도의 객관적 조건으로 보아 시간은 분명 한국편에 있다. 우리는 해방한국에서 민주한국 그리고 통일한국을 주도해야할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고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인내와 관용으로 국내통합을 이루면서 언젠가 들이닥칠 통일에 대비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간파할 수 있고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지도자를 키워나가야 한다.

전환기의 남북관계

林 采正(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외무통일위원)

1. 김영삼정권의 대북, 통일정책

1) 93년 3월 북한의 NPT탈퇴 선언이후 남북관계의 가장 큰 쟁점인 북한핵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시종일관 북한을 자극하는 '북한 압박정책'

① 한반도 비핵화선언, 남북간기본합의서 당사자로서 전혀 역할을 못함

--> 민족화해지향이 아닌 대결지향적

② 생존권적 위기에 처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냉전적 사고와 반복의식을 탈피하지 못함

③ 대북정책에 원칙과 일관성이 없음 -- 미국의 강경온건노선에 오락가락(미국추종)

④ 대통령자신의 통일철학 부재

2) 정책상의 혼란 사례

① 민족우선론 --> 핵을 가진자와 악수하지 않겠다.

② 남북특사교환 연계--> 철회

③ 별목공 수용불가 --> 수용하겠다

④ 동경에서 제재 --> 북경에서는 대화하겠다

⑤ 핵해결이전 정상회담불가--> 카터방북후 정상회담수용으로

⑥ 특별사찰 고수--> 실질적인 사찰로

⑦ 핵과 경협연계 --> 단계적 분리

⑧ 남북대화이전 핵문제해결--> 남북대화 제안 먼저하겠다

⑨ 경수로 한국형 관철--> 명칭 한국형에 구애받지 않겠다

& 특히 북한의 김주석 사망이후 북한의 체제붕괴를 암시하는 듯한 '흡수 통일' '김정일 건강 이상' '김정일 타도 전단' 등의 발언은 북한을 극도로 자극해 북한핵문제에 있어 북한의 남한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초래해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킴.

김영삼정권의 이러한 대북정책, 통일정책의 난맥상은 국민으로부터도 심각한 불신을 낳고 있는 실정이며, 언론은 최근 북미회담과 관련 일제히 '한국외교의 위기' 라고 비판하고 있다.

2. 북미관계 개선에 따른 향후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의 변화

- 1) 북한 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문제였으며 결국 북한의 NPT체제 복귀와 북미관계개선은 미국의 이익차원에서 미국의 기본적인 외교노선
- 2) 전세계는 이미 탈냉전의 시대로 개혁과 개방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 3) 대결과 전쟁의 위험이 가장 높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서 매우 긴요
- 4)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미일중러 4강의 한반도에 대한 치열한 자국이익 추구의 경쟁체제
- 5) 미국의 동북아 한반도 정책이 소모적인 방식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통한 주도권 행사에서 정치경제적인 주도권 행사를 통한 자국의 이익 관철로 정책 전환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급격한 국제정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통일로 가는 전환점에 이르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도 일방적인 대북 강경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핵-경협단

계적 분리, 남북대화 선 제의, 정상회담 유호 입장 천명, 특별사찰 및 경수로 한국형 명칭 고수 철회, 대북 자극적 발언 자제 등 정책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3.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맞이할 전향적인 자세

- 1) 일차적으로 남북간 불신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 필요
- 2) 남북관계의 주도권 행사를 위한 원칙있는 정책 수립 (대미의존적 자세 탈피)
- 3) 북한의 생존권적 위기를 민족화해적인 시각에서 수용지원해야
- 4) 핵--경협 연계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경협 먼저 전면적인 허용
- 5) 북미, 북일 수교의 진척을 위해 막후에서 지원해야
- 6)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평화협정 대응 --남북간 체결, 4강 보장
- 7)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간의 현안 일괄 타결 추진
- 8) 군축등을 통한 군사적 비용의 민족공동이익과 복리 복지 재원으로의 전환
- 9) 국제정세에서의 한반도 민족이익을 도모하는 '민족경제발전' 방안 제시

통일의 시대와 우리의 과제

金 南植 (평화연구원 수석연구원)

1. 오늘의 시대는 [통일의 시대]이다.

그것은 다음의 이유때문이다.

(1) 통일을 방해해 온 외적 요인이 크게 해소되었다는 것.

그간 통일을 어렵게 한 것은 다름아닌 동서냉전대결체제라고 볼 수 있다. 해방후 동서냉전이 한반도에 그대로 투영되어 남과 북은 동서냉전체제에 각기 편입될 수 밖에 없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의 한 성원으로서 국제공산주의 운동노선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북한의 사회주의를 남한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적화혁명노선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노선은 한반도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인 동시에 사회주의 진영의 확대와도 직결되던 것이었다. 남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은 미,일과 밀착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연합된 힘에 의해서 북한지역까지 자유진영의 세계로 확대해 나가는 승공통일정책을 추구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노선은 한반도가 남한중심으로 통일된다는 것과 동시에 자유진영의 확대를 의미했던 것이다. 이처럼 동서냉전체제하에서는 참된 의미에서의 민족 통일보다는 진영의 확대가 보다 중요했으며 민족자결원칙에 의한 통일정책은 물론 추구할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 민족이 주체가 되어 통일을 추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동서냉전체제가 해체되고 한반도 분단과 그를 고착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던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은 상호간에 대결이 아니라 협력과 동반자 관계로 변해가고 있으며 진영개념이 아니라 자기나라의 국익만을 중요시하는 한반도 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간 냉전시대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남북한이 공히 한반도 분단에서의 책임있는 강대국들의 협력과 동의없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항상 강대국

에 의한 간섭과 제동에 걸려 남북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냉전체제의 주역들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변했기 때문에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 통일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그간 한반도 통일에 이르지 못하게 걸림돌이 되는 외적 요인들이 크게 해소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시대를 통일시대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고 본다.

(2) 남북한의 통일은 일거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통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힘에 의한 흡수통일, 제도통일은 불가능하며 장기적인 공존, 공영을 거쳐야 한다.

우리의 통일은 긴 과정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의 시대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해방후 남과 북은 전혀 다른 이념과 체제가 형성되어 그것을 근 반세기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남북한의 이념과 체제상의 차이는 매우 큰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여 자본주의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집단주의 사회로 변모했다. 이와는 반대로 남한사회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기치하에 자본주의 방식에 의해서 근대화를 추진함으로써 개인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가 형성된 것이다. 이와 같이 상이한 이념과 체제는 냉전체제하에서 상호 대결과 경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사회체제는 물론이며 주민들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에 있어서도 전혀 상반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남북한의 이념과 체제상의 차이는 단시일 내에 하나의 이념과 체제로 통합될 수는 없으며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의 단일한 체제로 되기에는 어려운 것이다.

북한에서,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과 민족대단결을 바탕으로 하여 1 민족1국가, 2제도 2정부를 원칙으로 하는 연방제통일방안을 주장하는거나, 남한측에서의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 하나의 국가라는 3단계통일방안을, 그리고 아태재단에서의 남북공화국연합제와 연방제를 거쳐 하나의 단일국가로 통일해야 한다는 3단계통일방안 등을 보더라도, 통일은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독일과 예멘, 월남의 통일을 교훈삼아야 한다고 본다.

1992년도 2월에 발효된 [남북한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

의서]와 [남북한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했다는 것은 통일접근에 있어서 우선 정치, 군사적인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화해협력이라는 첫단계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다. 이처럼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여 남북한 공존, 공영의 길을 열어놓게 했다는 것은, 우리민족은 통일시대에 이미 진입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통일을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한다면 오늘의 이 시대를 통일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2. 바람직한 우리의 자세

(1) 냉전과 대결의식을 하루속히 청산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서냉전의 대결구도에 편입된 남과 북은 이데올로기는 물론 모든 정책에 있어서 냉전적인 대결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6.25라는 동족상잔의 민족적 비극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남북한 주민의식구조는 냉전적인 사고인 대결 및 증오의 사상으로 굳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대결의식은 냉전체제의 해체와 더불어 당연히 해소되어야 하며, 통일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선적 과제로 극복해야 될 문제로 생각된다.

그간 남과 북은 냉전과 대결의식을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 근 반세기 동안 그를 고취시켜 왔기 때문에 단시일에 해소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상과 대결의식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이며 획기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며, 교육을 비롯한 문화, 언론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냉전과 대결을 고취시키는 활동, 기관들과 대공관련법 등 각종 제도적 장치 부문에 대해서도 대담한 개혁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2) 남북통일에 임하는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의 체제와 이념을 떠나서 다같이 분단과 냉전의 강요로 인해 50년간 희생만을 당해왔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해방후 분단이 없었던들 그리고 냉전체제로 남과 북이 편입되지 않았던들 우리민족간에는 대립과 대결할 필요도 없었으며 반세기 동안의 대결로 인한 민족적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다. 냉전으로 인해서 공히 희생된 남과

북이기 때문에 냉전이 해체된 오늘에 와서는 민족적인 단합과 화해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 것이다. 체제와 이념을 일단 후퇴시키고 민족적인 화해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남과 북에 상이한 체제가 형성된 것은 분단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대결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념과 체제를 전면으로 내세워서 통일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은 냉전시대의 남북대결의 연장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념과 체제중심으로 민족의 통일문제를 접근해 나간다는 것은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으로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는 통일보다는 대결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화해부문의 제1조에서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분쟁에 간섭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제함으로써 체제이념문제를 후퇴시키고 그보다는 공존, 공영을 전제로 하여 우선 남북한 민족이 화해해야 한다는데 합의를 보고 있다. 체제이념을 뒤로 후퇴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전면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과 북은 공히 외세에 의한 분단과 냉전의 강요로 희생만을 당해 왔다는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냉전시대에 형성된 강대국과의 동맹관계는 통일시대에 부합되도록 재조정되어야 한다.

냉전시대에 형성된 동맹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기득권은 통일시대에 와서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새로운 관계로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과 북은 동서냉전이라는 틀속에 편입되어야 했기 때문에 남과 북은 주변강대국들과의 동맹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동맹관계가 상호평등과 대등한 원칙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협력해 왔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수평적인 관계보다도 수직적(종속적)이며 의존적인 관계로 발전해 왔던 것이다. 때문에 동맹국들은 통일시대에 와서도 양보할 수 없는 기득권으로 굳히게 된 것이다.

냉전시대의 이해관계의 일치로 형성된 동맹국들과의 모든 관계는 통일시대에 반드시 이해관계가 합치된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고 화해와 협력단계로 발전하면서 통일의 길로 나갔을 때 기존의 동맹

국들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동맹국들의 기득권이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냉전시대에 동맹관계는 통일시대의 역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것이 아닌 수직적이고 의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올 수는 없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나올 수 없다.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냉전시대에 형성된 동맹국과의 관계보다 남북한 민족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김대통령의 취임사 정신은 계속 불변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싶은 마음 간절한 것이다.

남북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인 문제로 볼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민족내부분쟁으로서 남북한 민족이 자주적으로 또한 주체적으로 통일문제를 추진해 나갔을 때 국제적인 문제도 원만하게 풀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때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또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 동맹국들과의 공조 및 협력이라는 차원보다는 남북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는 통일시대를 맞이하면서도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에 대해서 민주적 절차에 의한 국민합의를 원만하게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고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해 왔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통일방안이 두번이나 바뀐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관성이 결여된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이기에 때문에 국민적인 절대지지를 얻지 못하고 정치권에서 조차 합의를 못보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으며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이므로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간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되어 남북한 관계가 새로운 통일의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치권에서 적극 뒷받침해 주지 못함으로써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는

집단주의라는 체제의 특성상 하나의 통일방안으로 제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남한은 다원주의 사회로서 통일방안에 있어서는 여당, 야당 또는 재야 정치세력 등 다양한 주장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 통일정책과 통일방안도 하나의 방안으로 수렴하는 절차와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남북한 통일준비 문제

李 漢久 (대우경제연구소장)

1. 남북한관련 정책목표

- 결국 통일
 - 자유, 평등: 민주주의
 - 시장경제, 사유재산 중시
 - 북한체제가 변할때까지는 평화공존.
- } 사회주의체제 否定

<단기목표라면?>

- ①북한체제의 안정을 인정 --> 빨리 변할 수 있는 내부여량 축적을 지원
- ②북한의 핵투명성 확보
- ③상호신뢰 구축 --> 이산가족 교환방문 등 인도적 교류

2. 주변 국제환경

- 탈 냉전
 - 미국
 - 일본
 - 중국의 측면 지원
 - 북한의 핵문제 = 세계차원의 이슈
 - 한국의 발언권이 개입될 여지는 없음(?)
- } 의 대북한 접근

3. 북한의 핵투명성 확보가 애매한 상태에서 외국들이 북한과 적당히 타협

- (미래 투명성 확보중심)할 경우 한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 과거 핵투명성 문제
 - 0 확보방법 있는가? (기술적, 정치적)
 - 0 한국이 독자적으로 나아갈 길은 있는가?

柳 根一(조선일보 논설실장)

1. 脫 냉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 3중적 구조를 띠고 있다. (1)세계적 탈냉전 (2)한반도의 냉전지속 (3) 지구적 脫근대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도 3중적 구조일 수 밖에 없다. 즉 국제정치에서의 脫냉전에 대한 대응, 북한의 냉전적 자세에 대한 대응, 초국경적 세계화라고 하는 脫근대에 대한 대응을 모두 함께 써야 한다. 작금의 우리 외교와 대북정책에 관한 각 정파, 각 집단간의 갈등은 그 3개의 중층적 대응책들을 어떤 전략들에 따라서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를 둘러싼 異見의 표출이다. 특히 북한의 脫냉전을 어떻게 촉진하느냐, 미국의(중국, 일본 등의) 최근의 한반도 정책추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국민적 컨센서스를 모아야 한다. 그것을 이룩할 방법이 무엇인지 더 언급하기 바란다.

2.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문제의 핵심은 미국의 '평양行 버스'에 대해 우리가 '갈등적 공조'를 할 것인가, 아니면 '無갈등적 공조'를 할 것인가에 있다. 발제자는 후자에 비교적 가깝다. 그러나 설령 그것이 이름더라도 보다 많은 것을 따내기 위해서는 전자의 전술도 구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는?

3. 통일준비와 관련해서

발제자는 우리쪽이 통일의 주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북한의 변화'를 당위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문제는 북한을 '북한국가' '북한체제' '북한정권' 및 '북한의 정책'으로 구별해 볼 때, 발제자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변화'를 그중 어느 것까지 기대하고 있으며, 그 기대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토의했으면 한다.

토론요지

朴 虎聲 (西江大 教授)

나는 최상용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저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북관계와 관련된 현 시대상황에 대해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히고, 둘째, 이에 기초하여 최 교수님의 발제문에 나타난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셋째, 마지막으로 제 자신의 관점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나는 특히 남북관계와의 관련성에서 볼 때, 한국의 현재는 '이중성의 시대'라 생각한다.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이중성으로 점철되어 있다.

1) 최 교수의 발제문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지금 한국사회는 '냉전'적 기류와 '탈냉전'의 흐름이 뒤섞여 있다. 예컨대 남북 정상회담을 실현시키기 위해 보여 주었던 남한 정부의 화해적 열정과, 그 직후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인해 야기되었던 이른바 '조문파동' 및 '주사파 파동'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일련의 공안정국적 냉기는 그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2) 한편으로는 '한민족 공동체'론을 선포함으로써 북한을 한 민족의 일원으로 포용해야 함을 역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킴으로써 아직껏 북한을 민족적 적으로 규탄해 마지 않는 모순을 지속시키고 있다.

3) 북한에 대한 남한체제의 우월감과 자신감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두려움 내지 열등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은밀히 또 때로는 공공연히 '흡수통일'에 대한 강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의 가능성을 끝없이 설파하고 있다.

4)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극명히 표현하였듯이 "어떠한 우방도 민족에 우선할 수 없다"는 '민족제일주의'를 선포하였음에도, 민족문제의 해

결을 오히려 주위 강대국, 특히 미국의 주도에 떠맡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은 김일성 사후 급속한 북한-미국의 접근에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실리는 모두 미국 등에 넘겨주면서 경수로 제공에 따른 비용 등 부담만을 일방적으로 떠맡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2. 발제문에 나타난 최 교수의 견해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개의 간단한 해석상의 차이 또는 의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동감을 표할 수 있다. 특히 미소 냉전체제 붕괴의 공백을 대신하고 메울만한 위대한 대체사상이나 운동이 아직 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음미해 볼만 하다.

1) 필자는 남북한의 평화공존이나 파국이나의 갈림길은 주로 "북한이 세계 대세에 적응하여 핵문제의 해결과 함께 남한과의 평화공존을 통하여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이 주장은, 이러한 사태발전은 북한의 일차적 책임이거나, 또는 정반대로 이러한 사태해결의 일차적 주도권은 북한에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과연 그러한가?

2) 무엇보다 남북한이 처해 있는 사회적 상황의 차이를 고려할 때, 남한의 '냉전'과 북한의 '냉전'의 속성을 과연 동일한 것으로 이해해도 무관한가. 또는 그 성격을 엄밀히 구별할 필요는 없는가? 아울러 특히 남한의 냉전적 환경을 치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책은 무엇인가?

3) "핵문제에 관한 한" 미국의 입장은 과연 그리고 왜 한국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가?

4) 왜 그리고 어째서 "멀지않은 장래에 다가올 통일한국의 주체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주장이 가능해지는가?

5) '자유', '평등', '평화'는 -물론 통일의 원리로서는 손색이 없는 이상이지만- 반드시 한반도적 특수상황에만 적용시킬 수 없는, 지나치게 보편적인 방향설정은 아닌가?

3. 현재 북한은, 특히 소련 및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 이후,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과거와는 달리 통일보다는 오히려 평화공존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에 의해 야기된 핵 갈등은 평화공존을 전투적 방법으로 쟁취해 나가려는 안간힘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남한은 전통적 평화공존론보다는 흡수통일론 쪽으로 기울고 있는 듯하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의 '냉전'은 전투적 공존, 그리고 남한의 그것은 전투적 통일을 각각 겨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쪽의 '전투성'이나 장기간의 민족적 이질성 등을 고려할 때, 나는 급속한 통일보다는 오히려 장기간의 평화공존이 궁극적 평화통일에 더욱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정책토론회 참석자 약력

□ 최상웅 (崔相龍) CHOI, SANG-YONG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사
일. 동경대대학원 정치학박사
고려대 정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現)
고려대 평화연구소 소장(現)
남북대화 자문위원(現)
한일포럼 대표단(現)

□ 류근일 (柳根一) YOO, KUN-IL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석사
조선일보 이사대우 논설위원실장(現)
종합유선방송 (CATV) 위원회 위원(現)
한일포럼 위원(現)

□ 임채정 (林采正) RIM, CHAE-JUNG

고려대 법과대 법학
민통련 정책실장, 상임위의장, 사무처장
민주당 노원을지구당 위원장(現)
민주당 당무위원(現)
민주개혁정치모임 前 이사장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現)
국회 외무통일위원(現)

□ 이한구 (李漢久) LEE, HAHN-KOO

서울대 상과대 경영학 학사
미. 캔사스주립대 경제학 박사
대우경제연구소 소장(現)
대우경제연구소 소장(부사장)<現>

□ 박호성 (朴虎聲) PARK, HO-SEONG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사
독베를린대 대학원 정치학석사
독베를린대 대학원 정치학박사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現)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장(現)

□ 구창림 (具昌林) KU, CHANG-RIM

서울대 문리대 외교학 학사
서울대대학원 외교학 석사
국회의장실 비서실장(1992)
21세기정책연구원 감사(現)
민자당 정세분석위원(現)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간사(現)

□ 김남식(金楠植) KIM, NAM-SIK

평화연구소 수석 연구위원(現)